

둘로 쪼개진 조국 정국… 민생·경제 실종 ‘비정상 국가’

2019 마지막 국정감사

내년 총선 거 앞두고 민심 잡기
양 진영, 조 장관 두고 대치전선
與 “민생국회” vs 野 “정책전환”

20대 국회가 7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하지만,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감 2주차에는 사법부·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둔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장관과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조국 퇴진’ 여론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 지지 단체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맞대응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어 ‘조국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비위·한계 등을 지적하고, 여

론을 휘감기도 한다. 특히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국감은 민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는 통상 국감을 위해 매년 하반기마다 물밀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이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난전을 이어갔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 초반에도 조 장관을 두고 대치전선만 확대했다.

여야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통계를 가공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감에서도 발표되는 동떨어진 조 장관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 진영 모두 조 장관 응호와 파상공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일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록 모자란 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의 포기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 불경기 심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로 몰락하는 모양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전업 ‘집주인’ 1.8만명, 月수입 279만원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원 큰 차이 없어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년 사이 963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연봉 3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 신고자는 267만명으로, 월 평균 퇴직소득이 10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수입이 170만원 많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기준기사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주택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서졌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벼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태풍 피해 지역 사고수습 점검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도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할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논란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지난달 27일 대국민 메시지 이후 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이후 지난 달 28일 조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서초동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가 열렸고, 지난 3일에는 광화문 조 장관 규탄집회(주최측 추산 약 300만명)이 각각 열리며 ‘국론분열’ 양상이 뚜렷해졌다.

의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국론분열 양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은 뚜렷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 입에서 향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보다 민생·경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조 장관 또는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다. 9월 말에는 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언급할수록 국론분열이 일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스웨덴에서 북미간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한·아세안 정상회

의 역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현안을 잠시 뒤로 미루고 생·경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 및 국무회의 때 제18호 태풍(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경북·제주 등 지역 사고수습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 등으로 퍼져나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도 준비 중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시중銀 ‘금중대’ 이자 장사로 2.3조 수익

최저 0.5%로 지원받아 10%로 재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최근 5년간 2조38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최저 0.5%로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최고 10.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평가다.

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중대 제도를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 16개가 대출 이자율 차이로 얻은 수익은 2조3871억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영세자영업자·신성장·일자리·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대출 안정화를 위해 한은이 시행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전체 금중대에서 순이익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금중대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 7034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4조3130억원으로 33.7% 증가할 때, 같은 기간 순이익 상위 5개 은행은 이익이 7조 9251억원에서 12조212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조 의원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제도가 편중됐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석대성 기자

하도급 대금 떼어먹어도… 공정위 제재 70%는 ‘경고’에 그쳐

313건 중 고발까지 진행된 사건 5건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는 부당행위가 늘고 있지 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70%가 경고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솔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재 수

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39건에 달했다.

/석대성 기자